

세계 경제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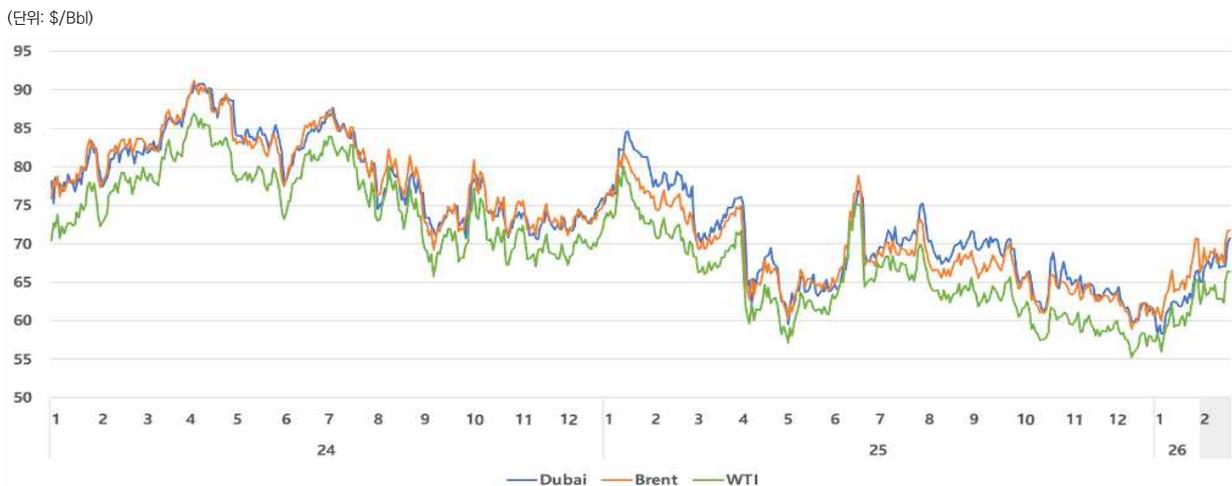
○ 미국-이란 군사적 긴장 고조 및 핵협상 교착 | 2026-2-18; 2026-2-19 경향신문

- '26년 2월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1차 핵협상이 열린 데 이어 2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협상이 재개됐으나, JD 밴스 미 부통령은 "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"고 밝히며 협상 결렬 시 군사 옵션 검토를 시사함.
 - 미국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, 탄도미사일 폐기, 중동 대리세력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, 이란은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으며 탄도미사일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함.
- 현재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이란 인근 해역에 전진배치됐고, 제럴드 R. 포드 항공모함 전단도 지중해 진입을 앞두고 있음. 한편,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배치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군의 공격에 대비 중임.
- 세계 원유 공급량의 5분의 1을 수송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 원유 공급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음.
- ❖ 지정학적 불안에 따라 '26년 2월 국제유가(2월 20일 기준)는 두바이유(9%), 브렌트(6.2%), WTI(6.2%) 모두 전월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지속적 유가 상승 시 2분기 이후 국내 수입물가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미 연방대법원,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 | 2026-2-21 경향신문; 시사저널

- '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함. 미 대법원은 "세금·관세 등 부과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"며 "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"고 밝힘.
-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%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선언함. 이는 무역법 122조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국가안보·무역관행 등의 조사를 통해 무역법 301조,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이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으로 해석됨.
- ❖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·철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묶여 있어 이번 판결과 무관하며, 반도체에 대한 관세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당분간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보임.

■ '24~'26년 2월 국제유가 추이 ■



국내 경제 동향

1월 실업률 4.1% | 2026-2-11 국가데이터처

- '26년 2월 11일 국가데이터처는 「2026년 1월 고용동향」을 통해 1월 실업률이 4.1%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 상승하였다고 발표함. '26년 1월 취업자는 2,798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천명 증가하였으며, 15~64세 고용률은 69.2%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 상승함.
 - 청년층(15~29세) 고용률은 43.6%로 전년 동월 대비 1.2%p 하락하고, 청년층 실업률은 6.8%로 전년 동월 대비 0.8%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 - 실업자는 121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8천명 증가하였으며, 60세 이상과 30대 등에서 증가하였음.
 - 농가 고용률은 69.0%, 실업률은 2.1%로 전체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.
- ❖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이 병행되면서 고용 회복의 체감도는 제한적인 모습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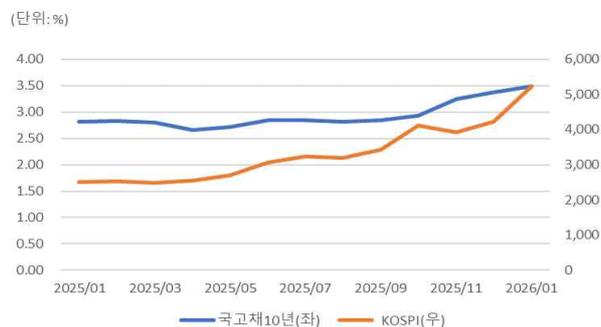
2026년 1월 금융시장 동향 | 2026-2-12 한국은행

- '26년 2월 12일 한국은행은 「2026년 1월 금융시장 동향」을 통해 시장금리 상승과 1월 주가 상승 등을 발표함.
 -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대 변화와 재정확대 경계 및 채권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으로 상승함.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책 기대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, 2월 들어 차익실현,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, AI 수익성 우려 등이 맞물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.
 - 가계 대출은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축소되었으며, 기업대출은 연초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로 전환됨.
 - 은행 수신은 크게 감소한 반면,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와 주식형펀드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.
- ❖ 금리 상승 속에서도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가계의 위험자산 노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.

■ '24~'26년 1월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■



■ '25~'26년 1월 국고채10년물 금리 및 KOSPI 지수 추이 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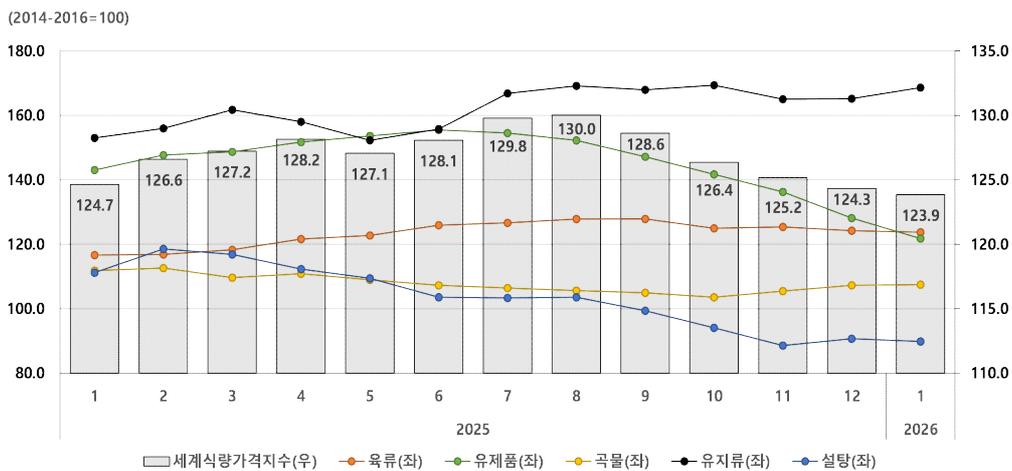
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○ FAO,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락세 지속 | 2026-02-06 FAO;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-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는 '26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(124.3p) 대비 0.4% 하락한 123.9p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 세계식량가격지수의 하락은 지난 '25년 9월부터 5개월간 이어짐. 품목별로 육류(-0.4%), 유제품(-5.0%), 설탕(-1.0%)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며, 곡물(+0.2%), 유지류(+2.1%)는 전월 대비 상승함.
 - (곡물 가격) 러시아·미국의 월동기 밀 작황에 대한 우려, 아르헨티나·브라질의 옥수수 파종기 기상여건 우려, 미국의 강한 에탄올 수요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0.2% 상승, 전년 동월 대비 3.9% 하락
 - (유지류 가격) 동남아시아의 팜유 생산 감소, 남미의 대두유 수출 가능 물량 감소, 흑해 지역의 해바라기유 공급 부족으로 전월 대비 2.1% 상승, 전년 동월 대비 10.2% 상승
 - (육류 가격) 수요 둔화 및 안정적인 공급이 이어지며, 전월 대비 0.4% 하락, 전년 동월 대비 6.1% 상승함. 다만, 브라질산 소고기의 경우 중국 수요 증가로 가격 하락 압력이 상쇄되었으며, 브라질산 닭고기의 경우 국제 수요가 지속되며 오름세를 보임.
 - (유제품 가격) 유럽과 미국의 원활한 치즈 공급, 계절적 유지방 증산 및 유럽의 버터 재고 누적으로 전월 대비 5.0% 하락, 전년 동월 대비 14.9% 하락
 - (설탕 가격) 인도의 생산 반등 전망과 태국의 양호한 작황으로 전월 대비 1.0% 하락, 전년 동월 대비 19.2% 하락
- ❖ 우리나라 '26년 1월 수입물가지수(원화기준)의 전년 동월 대비 변화는 곡물(-0.7%), 유지(+6.6%), 축산물(+12.8%), 낙농품(-3.9%), 원당(-17.5%)에서 FAO 세계식량가격지수의 품목별 등락 흐름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임.

■ '25~'26년 1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■

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○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양곡수급계획 수립 | 2026-02-12 농림축산식품부

- '26년 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'2026년 양곡수급계획'을 수립함. 계획에 따르면 '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(약 67만 8천ha)보다 약 5.6% 감소한 64만ha 내외로 설정됨. 또한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면적은 약 9만ha로 계획됨.
 - '26년 전략작물 품목별 목표 면적: 두류 3만 2천ha, 가루쌀 8천ha, 하계조사료 1만 9천ha, 옥수수 3천ha, 깨 4천ha, 수급 조절용 벼 2만 1천ha, 울무·수수·알팔파 등 3천ha
- 한편, 농식품부는 콩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힘. 이에 따라, 백태(메주콩)와 콩나물콩의 '26년 전략작물 직불금은 전년도 직불 이행 농업(법)인이 전년도 이행 면적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임. 또한 백태·콩나물콩 직불 이행 농가가 벼 재배로 회귀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 중임.
- ❖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된 「양곡관리법」에 따라 수급 계획범위가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됨. 이에 정부는 매년 쌀 수급균형을 위한 논 타작물 면적 목표를 수립·관리하여야 하며, 이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의 구조적 전환을 시사함.

○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| 2026-02-12 농림축산식품부

- '26년 2월 12일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그리고 「농어촌정비법」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.
 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은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,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·운용계획·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함.
 - 「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」은 규제샌드박스* 형태로 운영되던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·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함.
 - *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(기간·장소·규모 제한)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·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
 - 「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반려동물 사료·용품·의약품·서비스 산업의 창업, 전문인력 양성,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.
 - 「농어촌정비법」은 수혜면적 30ha 이상 50ha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*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, 국가 재정 부담을 확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** 개보수 등 재해 대응 기능을 강화함.
 - *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어촌용수 개발, 경지 정리, 배수 개선, 농지 확대·조성, 저수지 수질 개선, 토양 개선 등 농지의 개발·이용에 필요한 사업 전반을 말함. 기존에는 수혜면적 50ha 미만의 사업은 시·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.
 - **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, 양수장, 배수장, 방조제, 용수로, 배수로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
- ❖ 이번 법안 통과는 농협 지배구조 개선, 유통 디지털화, 신산업 육성, 농업 인프라 국가 책임 강화 등 농정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됨.